

감사원 “일부 철도 터널공사 안전 부실 ... 과다 공사비 환수”

도내 철도 터널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단 강원본부와 영남본부가 5건의 철도 건설로 14개의 터널을 건설하면서 터널의 붕괴를 막는 록볼트를 당초 설계보다 2,386개~6,203

개가 부족하게 반입,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 공사비가 7억9,000여만원 가량 과다하게 지급됐으며 공단 측에 환수 방안 마련과 해당 하도급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 벌점 부과 등을 요구했다. 류재일기자

발주물량 감소 건설업계 내년 전망 먹구름

올림픽 관련 대형공사 마무리·주택시장 하락세 겹쳐 경영난 우려

도내 건설시장의 발주물량 감소로 지역업체의 경영난이 우려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형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데다 올해 활황이 이어진 부동산시장도 내년에는 하락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내년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발주물량이 4조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도내에서 발주한 공사물량은 동계올림픽 관련 기

반·시설공사, 교통망 구축 등에 따라 지난해에는 4조2,309억원, 올해는 4조395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공사물량이 크게 늘어났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대형공사 발주가 부족해 전체 공사물량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까지 도내 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공사물량은 올림픽 관련 공사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11월 종합

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1조986억원으로 2012년 1조1,646억원, 2013년 1조3,157억원, 2014년 1조1,190억원 등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된 아파트 착공 물량도 공급과잉 우려에 따른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사업 등 대형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아파트 분양시장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전체 공사물량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1176억원을 잡아라”

강릉차량기지 공사 발주·내년 착공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공사가 본격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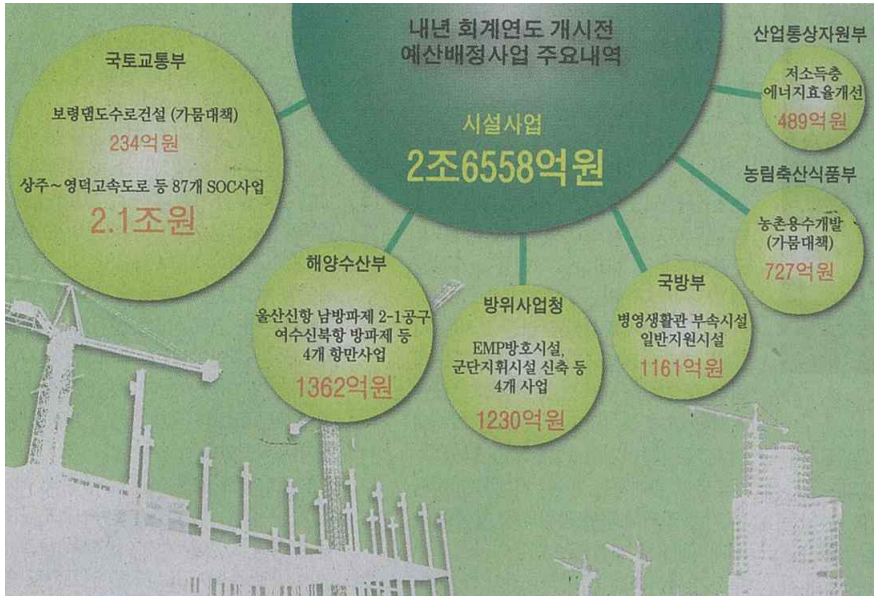
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총 공사비 1176억원이 소요되는 강릉차량기지 건설공사가 발주됐다. 입찰은 28일부터며 마감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입찰이 마감되면 내년 2월 착공, 2017년 완공된다.

강릉차량기지는 구정면 덕현리 29만5314㎡ 부지에 고속열차 12편과 일반 열차 8편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된다.

한편 강릉 차량기지 건설공사는 지난 7월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강릉 구정면 주민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지역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안은복 rio@kado.net



정부,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경제활성화 뒷받침

시설사업 2.6兆 조기 투입

내년 초 도로, 항만, 도수로 등 각종 시설사업에 2조6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조기 투입된다.

정부가 내년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3년(71.6%)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총 330조6716억원 규모의 내년 세출 예산 중 1분기(132조5035억원)와 2분기(92조3754억원)에 걸쳐 224조87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하고 인건비, 기본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상주~영덕 고속도로, 보령댐 도수로 건설 등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감안해 배정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3조4885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의 경우 이달 중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가 가능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시설사업이 2조6558억원 규모에 이른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87개 SOC(사회기반시설)에 2조1000억원을, 보령댐 도수로 건설에 234억원을 배정하는 등 2조1589

억원을 조기 투입하고 해양수산부는 울산신항 남방파제 2-1공구, 여수신복합 방파제 등 4개 항만사업에 들어가는 1362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에 포함했다.

방위사업청은 EMP(전자기파) 방호시설·군단지휘시설 신축 등 4개 사업에 1230억원을 배정했고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부속시설·일반지원시설 등에 1161억원을 할당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농촌용수개발 727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489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계획에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이달 안으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 사업은 이달 중 사업공고가 가능해 집행 시기를 최소 2주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정부, 중앙행정기관 등 107개 기관 규제개혁 저해행태 점검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등 부당 진입규제 22건... 총 99건 적발

A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관내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3개 하도급 업체들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43억3400만원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었다.

B지자체는 지난해 12월 '6가구 이상 다가구주택 허가'를 제한하라는 기관장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8가구 규모의 다가구 주택 신축 민원을 부당하게 반려처분하는가 하면 C지자체는 작년 5월 공장 신설 승인 신청 등 4건의 민원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 등을 부당하게 요구해 민원을 최대 517일간 늦게 처리했다.

신고접수 강화... 신속한 확인, 시정조치 체계 수립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부조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법령상 근거 없는 서류제출 요구 등 규제남용 21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입찰자격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22건 △행정소송·심판결과 미이행 등 처리지연 27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29건 등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규제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집행 사례

에 대한 신고접수를 강화하고 신속한 확인 및 시정조치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조실, 행자부,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민원처리 시스템 및 인·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규제개혁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적발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민간의 시각에서 지자체 행정행태 등을 평가하는 기업체감도 지도의 조사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 간 자발적인 개선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저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처리 시스템 등의 제도도 적극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